

---

## [공유]가족관계등록법 대응

---

2008년 4월 10일 오후 9:43

저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일하고 있는 최은아입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 활동가 및 소속단체 여러분께 알립니다.

1. 올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고, 부족하지만 어쨌든 입법 활동이 일단락되어 <활동자료집>을 내고 공동행동 해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법에 의해 현실에서 여러 인권침해가 드러났고,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25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2. 지난 4월 8일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여성의 전화, 인권운동사랑방(\*공동행동의 자격으로 결합)이 모여서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회의(가칭)'를 했어요. 이날 토론된 것은 시급하게 고쳐야할 것으로 현재 상황과 과거 이력을 보여주는 것을 분리해내자는 것이었어요. 또한 법의 명칭과 목적을 바꾸는 대응은 총선 이후로 전망했어요. 이날 모인 활동가들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가 결국 민법에 규정된 가족범위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공유하고 호주제를 떠받치고 있던 가족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가 여성 사안만이 아니므로 연대의 폭을 확장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3. 일단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과 과거 이력을 보여주는 것을 분리하는 문제를 시행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입장을 정한 후 대법원을 압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제제기 방식은 대법원 앞 기자회견이나 피해자 증언대회, 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 진정, 대법원과 면담 등이 제기되었어요. 지난 4월 4일 여성부 주관으로 '가족관계등록법' 간담회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재정과 시간 운운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께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가신분등록제에 관한 입법운동을 해왔던 단위로서 책임도 있구요. 또한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회의(가칭)'와 어떻게 연대활동을 해나갈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가능한 안은 첫째, 공동행동은 앞으로 꾸려질 연대회의에 일원으로 결합해 적극 대응활동을 해나가는 것, 둘째 연대회의에는 들어가지 않고 사안이나 필요에 따라 결합하는 것 셋째, 공동행동은 수임을 다했으니 해산절차를 밟고, 이후 대응은 개별단체가 판단해서 결합여부를 결정하는 것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14일까지는 의견을 주세요.

5. 연대회의의 다음 회의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민우회에서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입니다.